

##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이 용 남

(한성대학교 총장)

### 目 次

1. 도서관 정책과 행정의 문제
2. 사회적 인식의 문제
3. 미래형 도서관에 대한 논의
4. 전문직다운 의식으로

인류역사와 함께 비롯된 도서관은 사회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오랜 세월 사회환경에 적응해 왔다. 도서관 발전의 역사를 꿰뚫는 어떤 중심축이 있다면 필자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그 하나는 도서관이란 기관이 누구를 주된 대상으로 봉사를 할 것인가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한 발전과정의 축이며, 다른 하나는 도서관의 자료가 어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왔느냐를 중심명제로 한 발전과정의 축이다.

전자의 경우, 초기의 도서관이 고대시대 성직자나 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차차 부호, 학자 등 사회 엘리트 집단을 주된 봉사대상으로 삼다가 근세에 와서 시민대중으로 봉사대상층을 확대하고 하향시켜 온 과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후자의 경우는, 진흙관에서부터 파피루스나 비단 등의 두루마리 서사재료와 낱장본의 양피지를 거쳐, 종이의 개발과 인쇄술의 발명으로 도서관의 규모나 자료관리 기술을 개선시키던 중, 오늘날 새로운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시대로 접어든 과정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이 두가지 중심축의 관점은 사회 및 정보환경 변화와 도서관 문화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역사적 측면 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측면에서 현재 일선 도서관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몇가지 이슈들 즉, 정책 및 행정환경의 문제, 정보기술 환경의 수용문제, 도서관과 전문직에 대한 사회인식의 문제 등을 점검해 봄으로써 도서관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도서관 정책과 행정의 문제

과거시대의 도서관은 국가정책의 바탕에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설립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도서관이 각 설립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적 의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도서관 정책을 통해 체계적인 발전과 영향을 미칠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 각국은 도서관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전담부서를 마련하여 효율적 행정을 펼쳐나갔던 것이다. 근대적 도서관의 역사가 짧고 내용이 빈약한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효율적인 도서관 정책을 통해 도서관의 싹을 키워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 지름길은 전문적 단체를 구성하고 도서관법을 제정하는 길이라 믿어, 도서관계에서는 1955년 도서관협회의 재건과 동시에 도서관법의 입법을 서둘러 시작한 후, 8년여의 세월만에 드디어 1963년에 최초의 도서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수없는 실패를 통해 입법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의 선배분들은 국회 기능을 대신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이 오히려 절차상 손쉬울 수 있다는 판단아래, 내용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일단 먼저 만들어 놓은 후 미비점은 차차 개정해 나가자는 소박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제정 직후부터 시작된 개정운동이었건만 역시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으로 개정하는데 무려 24년의 세월(1987년)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고조되던 위기감은 드디어 도서관정책 전담부서를 아예 문체부로 바꾸자는 여론을 일게하여, 1991년 도서관업무가 문체부로 이관되고,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직 사서 배치 등 몇가지 추가적인 법개정의 성공을 보아 문체부의 도서관정책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이다. 전담부서 이관시의 정책의지와 새로운 법에 대한 기대는 컸으나 오늘날까지는 대체로 실망과 안타까움의 연속이라는 생각이다.

이자리에서는 그 구조적인 원인을 자기반성적 자세로 진단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 도서관계는 그 동안 도서관법이란 신화에 너무 매달렸지 않나 하는 반성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법으로 풀수 있으리라 믿었다. 법이란 제도는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정책결정권자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장식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부족한 수준이더라도 법에 명시된 시설·장서·직원기준의 적용문제나 도서관 기금의 문제 또는 사서직 관장배치 5년간 유예기간 동안의 행정노력 등을 곰곰히 살펴보면 수궁이 갈 것이다.

둘째로, 도서관정책 소관 부서의 변경이나 전담부서(課)의 설치 등, 도서관계가 그토록 소망했던 모든 제도적 장치는 하드웨어로만 끝났으며, 소프트웨어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생각이다. 법이나 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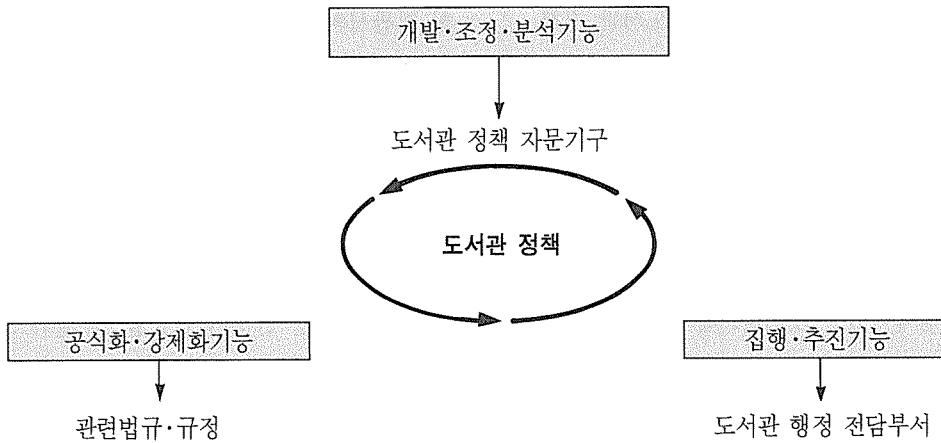
등의 하드웨어가 저절로 성과물을 생산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다.

그래서 도서관 정책수행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힘을 모으는 일이 앞으로의 최대과제라고 믿는다. 도서관 정책은 세부 문제의 개개내용에 단발적으로 대처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가 과거부터 주장해온 정책 시스템의 방법은 도서관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이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확고한 틀을 개발하는 일이다. 그러한 도서관정책 순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고 본다.

도서관정책을 정책답게 유지하게 하는 가장

(그림)



중요한 첫번째의 기능은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수 많은 관련기관과 조정하며, 그 시행결과를 분석하는 ‘도서관정책 자문기구’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개발된 정책을 각종 법규·규정·지침 등으로 공식화 또는 강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정책 순환과정의 두번째 기능이다. 그리고 도서관행정 전담부서는 위에서 이루어진 내용과 방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피드백되어 다시 정책개발과 조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엮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때 도서관정책 순환모형을 제대로 가동시키는 엔진역할을 해야하는

기구(기관)는 도서관정책 자문기구이며, 우리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바로 이를 위해 1989년 9월 7일(당초 이름은 도서관발전위원회) 처음으로 출발시킨 기구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관료제 조직의 생리상 이러한 자문기구는 유명무실해지거나 행정부의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될 염려가 있어, 문체부이관을 전후해서부터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우려한대로라는 판단이다. 교육부시절 89년과 90년에 각 1회씩, 그리고 문체부 이관후 92년부터 95년까지

역시 연간 1회씩의 본회의 모임이 있었으며, 93년과 96년도에 분과위원회 모임이 각 한차례씩 있었을 뿐이다. 모임 회수는 차치하고서라도, 모임의 형식이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논의된 결과가 정책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기미가 없는 요식행위의 형식적 위원회로서, 정책문제 해결에 별도움이 못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서관정책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책으로 힘을 모아야 할 사항은 이러한 기구의 제자리 찾기 노력이라고 믿는다. 우선 전체 도서관계가 이 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기구의 활동을 격려 감시하는 등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행정 관례상 자문기구의 활동에 관해 정부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정책전담부서가 이 기구의 의미와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토록하는 노력이 범도서관적으로 전개되어야겠다. 그런 연후에 법에서 위임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운영세칙’을 현행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보완하여 도서관정책 수행을 시스템화 하도록 하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사회적 인식의 문제

도서관정책이나 관련법규 등 국가차원의 의지에 못지 않게 도서관 문화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저변층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부터 도서관계에 큰 분노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부지역의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사건은 바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인

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도서관 명칭의 변경으로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직화라는 법의 적용을 피해보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행정행위의 자초지종은 다 아는 사실인만큼 언급하지 않겠으나,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통해 나타난 우리 사회저변의 도서관 인식 수준은 두려움을 느끼게까지 한다.

본래, 국가 정책이나 관련법규 등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오늘날의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더이상 중앙정부의 통제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지방정부나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식과 선택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반문화적인 이러한 행정처리의 배경에는 도서관계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에도 문제는 있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지역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그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아픔은 도서관이 과연 지역사회의 필수적 사회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나의 문제이다. 도서관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축해서 나타내주는 사회적 장치라던가 사회실행기관 등의 교과서적인 표현도 도서관인들에게는 부족한 느낌이지만, 사회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와 매우 유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정직군 공무원들의 이해에 따라 도서관 하나쯤 없애버리는 행정행위는 도서관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필수 시설이라는 인식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재확인된 것은, 지역사회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청소년 공부방정도의 기능이면 족하고, 전문직은 자료정리나 대출 등의 역할에 머무르면 되지 않겠느냐는 행정의 의식이며,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언론을 포함한 일반사회의 무감각성이다.

총체적으로 보아 이번의 명칭변경 사건은 '도서관이나 전문직에 대한 사회인식'이라는 근원적인 병소를 지니고 있는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 주소를 확인시켜준 하나의 사례이다. 건국 50년 동안 우리가 연출해온 자화상인만큼, 국가나 지방행정을 탓하기에 앞서 전체 도서관계가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가능한 어떤 묘책을 찾아내기에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우리들 고민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덧붙여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 명칭변경 사건의 수습 지원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중인 행정직 관장의 사서교육에 대한 일부 사서직들의 불만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직화는 효율적인 업무와 도서관봉사의 극대화가 목적이며 기존 사서직의 승진은 부수적 산물이 아니겠는가. 단기간의 교육으로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논리전개가 가능하겠으나 이번의 조치는 일회적이며 과도기적인 전술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될 것이다. 원리와 원칙은 학문에서 추구하는 이상이기는 하되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이나 행정의 수행에는 절충의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3. 미래형 도서관에 대한 논의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도서관계의 모습은 지난 십수년간 도서관 전산화 논의가 중심을 이루어 오다가 오늘날은 전자도서관 혹은 디지털도서관 등 미래도서관 논의로 발전되고 있다. 정보통신사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사업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정책 표명과 언론사들의 자사 홍보적 여론형성에 힘입어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9월에 개최된 디지털도서관 국제학술회의(한국문헌정보학회 주최)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전자화된 디지털정보가 인쇄매체를 상당부분 대체하게 됨에 따라, 결국 도서관도 정보의 소유나 공간의 개념에서 참조의 개념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전망 아래 미래형 도서관을 서둘러야 된다는 논리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주장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본래 도서관은 정보만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인 변화에 도움을 주는 기관인만큼, 미래도서관 지향적 논리는 장서개발이나 인간적 봉사 등 도서관의 기본을 등한시하게 한다는 반론이다.

미래사회의 도서관을 예측하는 논의는 선진국에서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 중심으로의 변화, 정보소유보다 접근을 강조하는 서비스의 변화 등을 신속히 수용하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아왔다. 커뮤니케이션 매체 변화의 전망에 있어서도, 새로운 매체는 항상 과거의 매체를 대체하거나 추월하지 않고 기능을 보

완하면서 공존할 것 이라는 논리 등이 그러하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구어(口語)와 문자, 필사(筆寫)와 인쇄, 단행본과 잡지, 연극과 영화, 신문과 라디오와 T.V 등의 관계를 참고해 보더라도,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간에는 보완적 기능을 유지하리라는 전망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논란의 초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체로 매체의 변화나 도서관 기능의 변화 등 미래예측 차원의 문제가 중심을 이루는데 비해, 우리의 논란은 여기에다 우리나라 현단계 도서관 현장의 입장이 덧붙여지고 있다. 즉, 우리의 미래도서관 논의는 “그 답론이 펼쳐는 달콤한 꿈에 젖어들어가는 동안 현단계 한국도서관현장을 형극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다. 우리 도서관의 최우선 과제는 장서개발 등 도서관의 중심요소를 제대로 갖추어 ‘도서관의 기본’부터 찾는 일인데, 미래도서관 논의는 도서관 현장의 관점을 덮어버리고 도서관운동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는 주장으로서,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선진국보다도 더하다는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선진국형의 미래예측 차원의 논란은 본인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자리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입장에서 무엇을 우선해야겠는가라는 대응전략의 논란에 있어서는, 선택적 가치 보다는 양면적 가치를 수용하는 자세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러할 때 우리의 도서관계는 현단계 도서관 현장에서의 수혈을 위한 기본찾기 과제

와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노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무거운 이중적(二重的) 과제를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현장의 기본찾기 과제가 미래사회 발전 추세의 부정이 아닌 것과 같이, 미래도서관 논의는 현단계 현장의 관점을 기피하거나 인쇄매체가 완전히 대체되는 구도의 극단적인 상황설정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여러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4. 전문직다운 의식으로

열악하고 왜곡된 오늘의 도서관문화를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 학계와 현장사서들의 자세를 성찰해 봄으로써 오늘 강연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수년전부터 문헌정보학계는 학자들의 학문자세와 방법에 대한 비판이 활발해져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학자들의 연구내용 중 많은 부분이 한국적 토양을 외면한 외국이론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우리의 현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적실성 있는 학문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인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공감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일찌기 그러한 자기 반성적 진통의 과정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특히 현장지향성이 강한 문헌정보학 입장에서는 그간의 일상을 벗어나 학문을 위한 학문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우리들 자세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 학계의 많은 연구 성

과물들이 이 시대 우리나라 도서관현장의 여러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뿐만아니라, 현장개선 노력에는 학자들의 '행동적인' 참여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강단과 글쓰기가 학자들의 고유한 설자리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크고 그 동안 전문직의 많은 인력이 갑자기 강단으로 흡수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학자들이 상아탑적 사고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장에 대해 죄스러운 느낌이다. 이론생산과 현장에서의 실천이란 경계는 원론적으로는 당연하겠으나, 우리의 여건은 현장의 힘의 부족을 보완해 주어야만 하는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도서관문화를 이끌어가는 실천적 역할은 역시 일선 도서관 현장의 전문직들의 몫이다. 도서관인들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며, 그동안 도서관발전을 위해 애써왔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전문직 사서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객관화시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장의 어려운 모든 원인을 무조건 외부환경 탓으로 불평하며 자

기성찰적 노력에 인색한 전문직들이 적지 않은 듯 하다. 또한 도서관 현장의 여건이 어렵고 전망이 어두우니 어차피 내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거나, 도서관문화의 터전이 되는 우리의 총체적 사회문화 수준이 이정도인데 어찌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체념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뿐만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력이나 대안모색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동료들도 역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시대의 도서관계는 전문직의 역할이 요구되는 업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실천하면서, 문제의식을 지니고 개선책을 찾아 조직화 해나가는 사서들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이루어지지 않는 친목모임에 대해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공허한 주장이나 불평만 하기보다는, 때와 장소를 조정하며 연락하고 설득하면서 일이 되도록 우선하는 조직력이 도서관계에 특히 아쉬운 때라고 믿는다. 그러할때 우리 도서관계는 어떠한 수준(시설·장서·인력·봉사 등)에 도달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주장도 필요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방법론에 더 고민하며, 흐트러진 구슬을 하나씩이라도 꿰어가는 조직력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